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가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지방발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준영(왼쪽)전남도지사·박광태(왼쪽에서 세번째)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남악신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전남도청 주변 남악신도시가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패션화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 청사 앞 벤치와 '음악꽃' 정원, 도의회 앞 주차장, 전남여성프라자 옥상 등에 다양한 형태의 색깔과 모양을 갖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Sun-City'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도청사 주변 음악꽃 정원의 야외무대 지붕에 동근 계란 모양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도의회 건물 앞 주차장에도 날아가는 학의 모습을 새겨놓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대규모 원형 형태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도청 청사 앞 잔디광장의 벤치에 나뭇잎 모양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신

축 중인 전남여성프라자의 옥상도 태양광발전 시설로 채울 예정이다.

거대한 돛대 형상의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은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 수변공원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작은 쪽배 모형의 태양광 조각공원도 조성된다.

전남도는 남악신도시에 입주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국비 80%·건설사 자부담 20%)을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첫 시범으로 민간아파트인 대우푸르지오 12개 동(550가구)에 12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지난해에는 현대 I파크 8개 동에 52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안착했다. 올해는 한국아델리움 등 3개 건설사가 28개 동 2천14가구에 32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 조기 착공해 달라”

■ 이명박 대통령-시·도지사 회의 뒤편 논의했다

“광주 R&D 특구 지정 등 전폭 지원을” 이 대통령 “지원할 것 있으면 돕겠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시·도는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는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을 조기완공해 줄 것”과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영남권 지자체도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에 대해 “시기를 빨리 앞당기려 한다”고 응답했으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고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 R&D 특구 지정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LED 조명도시 조성 사업 ▲가전로봇산업 육성 지원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광주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건의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

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만큼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서둘러 착공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전남지사도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지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조기 제정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우 및 2012년까지 조기완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공보사항으로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약 2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 ▲지방의 뉴타운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비의 50% 이상 정부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채희종·윤영기기자 penfoot@

면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채희종·윤영기기자 penfoot@

지자체 ‘제 식구 밀어주기’ 여전

광주시, 시의회·행정동우회 등에 예산 편성 전남도, 도정동우회·도 의정회 수천만원 지원

광주·전남 지자체가 경제난으로 긴축재정에 나서면서도 정작 전직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친목단체를 위해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지속 지원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직 광주시의원 41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광주시의정회에 대한 지원금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 지원비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원안통과돼 오는 9월 분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예초 광주시의정회가 사회봉사 활동 등 명목으로 모두 6천140만원을 신청했으나,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지난 2004년 이 단체

에 1천만원을 지원한 뒤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의정회 지원조례를 근거로 5년 만에 지원비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정회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친목단체인 의정회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회비를 모아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지원을 막은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부분이 다음해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행정동우회 광주시지회에 2006부터 올해까지 매년 2천5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지원금

은 환경봉사활동, 시정홍보책자 제작, 기초질서지킴이 활동 등에 쓰였다. 전남도는 올해 도정동우회에 3천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천~4천만원씩을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또 전직 도의회 의원 등으로 꾸려진 전남도 의정회에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썼다. 기초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광주시 광산·남구 등지도 해마다 200만~300만원을 구정동우회에 지원해왔다. 오미덕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공직사회와 밀접한 친목단체를 지원할 경우 공익활동을 펼치는 사회단체가 지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제식구 챙기기 구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 출연금 늘어 재정 압박

내년 12% 증가 169억 시의회 예결특위 지적

광주시가 산하 기관들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이 늘어나 광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뜰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출연금 지원이 늘어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비롯, 다른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09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 18개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출연금은 169억7천800만원으로, 올해 151억7

천만원에 비해 18억800만원(11.9%)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재)광주발전연구원 16억원의 출연금을 책정한 것을 비롯, ▲광주영어방송재단 8억원 ▲광주문화예술포럼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6억1천800만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억원 ▲2015하계U대회유치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결식아동후원재단 10억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법인설립 1억원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및 지역창업투자사 설립 20억원 ▲(재)광주디자인센터 10억원 ▲(재)광주과학기술포럼협력센터 3억원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7억5천만원 ▲교통문화연수원설립 운영에 42억원 등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재)광주발전연구원,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운영 및 대회유치활동을 위한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억, 10억원 증액했고 광주영어방송, 결식아동후원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에는 새로 출연금이 지원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일부 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체 종합감사결과 방안 운영 지적을 받은 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재정적 평가를 통한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